오바마, 시리아 지상군 투입은 “NO”

“IS 격퇴, 공습만으론 한계” 미국내 잇단 지적에
“이라크 정규군·시리아 온건 반군 훈련시켜 대응”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최근 이슬람 수니파 반군 ‘이슬람국가’(IS)를 격퇴하기 위해 시리아로 공습을 확대하겠다고 공포한 가운데 미국 내에서 공습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지상군을 투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공화당 소속 린지 그레이엄(사우스캐롤라이나) 상원의원은 14일(현지시간) ‘폭스 뉴스 선데이’에 출연해 “시리아에 지상군을 절대 투입하지 않겠다는 발상은 한마디로 환상으로, 접근법 자체가 잘못됐다”면서 “미군의 실질적 주둔 없이 지상에서 (현지) 군대를 만들어 IS에 대항하게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비판했다.

그레이엄 의원은 또 “미국은 현재 테러 작전을 펴고 있는 게 아니라 IS와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존 케리 국무장관이 최근 방송 인터뷰에서 “IS와 전쟁을 하는 게 아니라 매우 중요한 대(對) 테러 작전를 펴는 것”이라고 말한 것을 비판한 것이다.

예비역 육군 중장인 제임스 더빅은 이날 CNN 방송 ‘스테이트 오브 더 유니언’(State of the Union) 인터뷰에서 “IS를 격퇴하는 데서 공습은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습과 함께 미군 특수작전부대 투입, 온건반군 무장, 자문관 파견 등 3가지 전략이 병행돼야 IS 격퇴작전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예비역 육군 소장인 폴 이튼 역시 같은 프로그램에 출연해 “IS 격퇴 작전의 성공을 위해서는 지상군 투입이 필요하다”고 거들었다.

그러나 오바마 정부는 지상군 투입은 절대로 불가하며 이라크 정부군과 시리아 온건 반군을 훈련시켜 IS에 대항하게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이 앞서 10일 정책연설을 통해 “지상군이 다시 들어가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며 지상군 파병 불가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미 의회에 ‘시리아 반군 훈련 ·지원 권한’의 승인을 요청한 데 이어 존 커비 국방부 대변인은 12일 미 의회가 승인해 주면 연간 5000명 이상의 시리아 반군을 훈련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지지하는 자유시리아군은 정부군에서 탈영한 군인들로 구성된 반군으로, 공군 대령 출신인 리아드 알아사드가 2011년 7월 조직했다. /연합뉴스

韓 “IS격퇴, 인도적 지원 수준 동참”

訪美 김관진 안보실장 밝혀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14일(현지시간) 이슬람 수니파 반군 ‘이슬람국가’(IS) 격퇴를 위한 미국 주도의 국제연합작전 동참 여부에 대해 “우리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할 것이며, 아마 인도적 지원 범위가 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취임 후 처음으로 미국을 방문한 김 실장은 이날 오전 워싱턴DC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에 도착해 특파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김 실장은 구체적인 인도적 지원범위에 대해 “현재까지 이라크 난민 지원 등 여러 가지 도움을 주는데 국가 차원에서 120만달러(약 12억4000만원)를 지원한 바 있으며, 앞으로 추가적인 검토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수송이나 병참분야 지원 가능성과 관련해 그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공식으로 요청받은 바가 없다”며 언급을 삼갔다.

김 실장은 양국 현안인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시기 연기 문제와 관련해 “전작권 이양 문제는 작년부터 계속 협의를 해 오던 사안이기 때문에 올해 SCM(한미안보협의회)을 목표로 협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전망했다. 미국의 고(高)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THAAD) 도입 여부와 관련해선 “사드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공식 통보된 바 없고, 한미간에 협의된 바도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인도령 카슈미르 물난리…500명 사망 폭우로 홍수가 난 인도령 카슈미르 주도 스리나가르에서 14일(현지시간) 주민들이 먹을 것 등을 머리에 이고 강물로 변한 거리를 힘겹게 걸어가고 있다. 카슈미르 계곡의 저지대에 위치한 스리나가르는 도시를 관통하는 젤룸 강이 범람하면서 주민 15만명이 고립돼 있고 파키스탄과 인도 접경지역에서는 약 500 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美, 북한 억류 미국인 3명 석방 촉구

北 여행 자제 당부도

북한이 미국인 억류자 3명 가운데 1명인 매슈 토드 밀러(24) 씨에게 6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한 데 대해 미국 정부는 14일(현지시간) 억류자들을 즉각 사면·석방하라고 다시 촉구했다.

또 자국민에 북한 여행을 자제하라고 재차 당부했다.

젠 사키 미 국무부 대변인은 밀러씨에 대한 선고와 관련한 입장을 묻는 연합뉴스의 질의에 “북한 법정이 미국 시민권자인 밀러에게 ‘적대행위’ 혐의로 유죄를 선고한 것을 알고 있다”며 “그와 다른 억류자들이 체포되고 투옥되면서 기소된 혐의는 미국이나 세계의 많은 다른 나라에서는 체포 또는 투옥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사키 대변인은 ‘북한’에 대한 호칭으로 정례 브리핑 때 주로 사용했던 ‘노스코리아’(North Korea)라는 단어 대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DPRK·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이라는 용어를 썼다.

그는 이어 “북한 당국이 밀러와 케네스 배에게 관용을 베풀어 가족과 재회할 수 있게 사면을 허용하고 즉각 석방할 것을 요구한다”며 “아울러 제프리 파울과 그의 가족을 위한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집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사면 및 석방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지난 4월 관광으로 입국하면서 반공화국 적대행위를 감행한 미국인 밀러 매슈 토드에 대한 재판이 공화국 최고재판소에서 진행됐다”라며 “재판에서는 밀러에게 6년 노동교화형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미국 정부는 그러면서 자국민에게 북한 여행을 자제하라고 재차 당부했다. /연합뉴스

북한에 6개월째 억류돼 있는 미국인 관광객 매튜 토드 밀러(오른쪽)가 14일(현지시간) 평양의 최고재판소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최고재판소는 이날 밀러에게 불법 입국과 간첩죄를 적용해 6년 노동교화형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엘리자베스 2세 英여왕 “스코틀랜드 분리 독립 신중하라” 경고

사실상 반대의사 표명

18일(현지시간) 예정된 스코틀랜드 분리독립 투표를 앞두고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이 스코틀랜드 주민들을 향해 “신중하게 생각하라”고 말했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14일 스코틀랜드의 밸모럴 성 부근 교회에서 열린 일요예배에 참석한 뒤 지지자들에게 “사람들이 미래에 대해 신중하게 생각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고 AP 통신과 영국 언론들이 전했다.

여왕은 이번 투표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구체적으로 투표 방향에 대해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분리독립 반대 의사를 밝힌 것이며 독립을 지지하는 스코틀랜드인들에 대해 ‘경고’한 것이란 해석이 나오고 있다.

그동안 여왕은 스코틀랜드 분리독립 논쟁에 대해 왕실의 엄정한 중립을 강조하면서 주민투표 문제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여왔다.

버킹엄궁은 지난 9일 성명을 통해 “왕실의 엄정한 정치적 중립성은 영국 민주주의의 원칙이자 여왕의 재임기간에 실천해 온 신념”이라면서 “여왕이 이번 주민투표 문제에 개입하지 않을 것이다”고 밝힌 바 있다. 버킹엄궁은 당시 “여왕이 투표 결과에 영향을 끼치기를 바라고 있다는 생각은 명확히 잘못된 것”이라면서 “여왕은 이 문제를 스코틀랜드 주민의 일로 보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어머니가 스코틀랜드인이었으며 자신도 어린 시절 많은 시간을 스코틀랜드에서 보내는 등 스코틀랜드와 인연이 많은 편이다.

또 스코틀랜드의 밸모럴 성은 여왕이 남편 필립 공과 함께 매년 여름휴가를 보내는 곳이기도 하다.

앞서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지난 1977년 즉위 25주년 기념 연설에서 스코틀랜드와 웨일스의 자치권 확대 요구와 관련,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 웨일스의 왕과 여왕을 내 조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열망을 쉽게 이해할 수 있지만 나는 내가 그레이트 브리튼과 북아일랜드 연합왕국의 여왕으로 즉위했다는 것을 잊을 수 없다”라고 말한 바 있다. /연합뉴스